2019년, 고용위기를 노동문화의 개혁으로 승화시켜야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2018년 노동시장은 롤러코스터에 앉아 소리도 지르지 못하는 형국이었다. 2017년 취업자가 32만 명 늘었지만 2018년에는 10만 명 미만으로 가라앉았다. 2018년 2월부터 취업자 증가가 곤두박질치더니 7월과 8월에는 5천 명과 3천 명이라는 낯선 숫자까지 보여주었다. 작년 이맘때 2017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던 노동시장 전망은 고용절벽에 부딪쳤다. 그 이후 다소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12월에도 3만 4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2019년 첫 달에도 1만 9천 명에 그쳤으니 아직 긴 터널을 다 지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난 2년간 취업자는 연평균 21만 명 늘었고, 2016년 23만 명과 비교할 때, 좌절할 수준도 고용참사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인구고령화의 구조적 요인으로 취업자 증가의 둔화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이에 따른 대내외 경기둔화가 중첩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단기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휴벌이를 조장하는 장시간근로와 낮은 노동비용에 기대는 비정상적 노동문화에 대한 충분한 성찰 대신 이를 정상화하려는 노력, 즉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절벽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무차별적으로 확산·증폭되어 '비정상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양상을 보였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긍

정적 효과로 전환될 것이므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보완정책은 필요하지만 단기적 현상에 지나치게 매몰될 필요는 없다.

한국노동연구원(2018년 12월)은, 2019년 경제성장률이 2.7%라는 시나리오하에서, 취업자가 13만 명(상반기 8만 명, 하반기 18만 명) 늘어나 고용절벽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것이지만, 실업자 역시 109만 명으로 다소 늘어나는 한편,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60.7%와 3.9%로 2018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중장기 추세를 벗어났던 노동시장이 머쟎아 본래의 추세로 회복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들의 2019년 경제 및 노동시장 전망을 다루고 있다. 먼저 미국은 2018년 전례 없는 일자리 증가와 낮은 실업률(3.9%)을 기록하였고, 이러한 경기호황 국면이 6개월 이내에 경기둔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무역전쟁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야기한 불확실성이 직접 미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를 통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작년 하반기 나타난 경제의 이상 징후나 올해 초 정부 셧다운 등은 경기호황의 종말을 재촉하는 단초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고를 받아들여 미래의 경제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의 선회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경제성장의 안정적 둔화추세를 견지하는 중국은, 2018년 미국과의 통상마찰 등에 따른 1990년 이래 최저 수준의 경제성장(6.6%)에도, 산업구조 고도화 및 규제개혁을 통하여 '도시지역 신규 취업자 수'의 안정적 증가추세를 유지하는 한편, 대학생(졸업 후 6개월 내 취업률 90% 초과)과 농민공 등 핵심계층의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등 노동시장의 안정적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위험요인들에도 이러한 긍정적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발 불확실성 증가는 미국 의존도가 높은 노동집약형 산업과 기술집약형 산업의 고용창출에 일시적으로 다소간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설립 등은 생산적 노사관계를 위한 중국정부의 중장기 과제로 남아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2012년부터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실업률은 2.8%(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올해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 정비에 관한 법률」은 여성과 고령자 및 청년층의 고용을 늘리는 데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일하는 방식의 개혁은 노동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의 과실을 임금인상으로 보상함으로써 중산층을 늘려 수요의 확대를 도모하는 소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 공표 등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초과노동시간 상한의 설정 등 장시간노동을 줄이는 한편, 고도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하여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적절한 정책혼합(policy mix)을 구현하고 있다.

고용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을 위시한 주요 국가들의 성장 둔화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곧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국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다.

기회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사람에게서 찾아야 한다.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주어진 제약이라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시절을 함께 해왔던 노동문화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혁신적으로 재검토하여야만 한다. 장시간노동은 일과 삶의 균형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과 저임금노동은 공정임금으로, 정규직 중심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과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으로 개혁되어야만 한다. 백세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생애노동을 최적화하도록 정년은 연장되거나 폐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일하는 방식의 개혁 역시 필요하다.

일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맘껏 일할 수 있는 노동문화가 교육과 경험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모든 사람의 노동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러한 개혁의 궁극적 목표이다. 모든 국민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불필요한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개혁에 따르는 단기적 고통은 당사자들 모두가 나누고, 개혁의 과실 역

시 모두가 공정하게 나눠 궁극적으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든 국민의 행복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이러한 국가에서 각자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의 역할이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길을 꿋꿋이 함께 가야 한다.

KLI